

2014년 국가직 9급 사회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14년 국가직 사회의 난이도는 작년 2013년 국가직 사회에 비해 경제는 다소 어려웠으며 법과정치는 약간 쉽게 출제되었고, 사회문화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경제의 경우 7번 문항과 9번 문항에서 학생들이 문제 해석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문화의 경우 14번 도표 문항에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경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출문제집, 문제바이블을 반복적으로 꼼꼼하게 풀어본 학생들에게 유리했을 것입니다.

국가직 사회의 출제 경향을 보면, 경제 5문항, 법과 정치 10문항, 사회문화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파트별 세부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 경제는 시장의 유형(6번), 수요와 공급(7번), 합리적 선택(8번), 경제 지표 분석(9번), 환율의 변동(10번)으로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 법과정치는 시민 혁명(1번), 직접 민주적 요소(2번),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3번), 환류 모델(4번), 선거_우리나라 비례대표제(5번), 행정 구제 제도(16번), 헌법의 원리_국제 평화주의(17번), 미성년자 보호(18번), 제조물 책임(19번), 기본권(20번)으로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 사회문화는 사회 계층 현상(11번), 연구 방법(12번),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13번), 자료 해석_가족(14번), 일탈 행동(15번)으로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단원	2014년 국가직 9급 사회	
경제	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1	5
	II.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0	
	III. 시장과 경제 활동	2	
	IV. 국민 경제의 이해	1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1	
법과정치	I. 민주 정치와 법	3	10
	II.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1	
	III. 우리나라의 헌법	3	
	IV. 개인생활과 법	1	
	V. 사회생활과 법	2	
	VI. 국제 정치와 법	0	
사회문화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	5
	II. 개인과 사회 구조	1	
	III. 문화와 사회	0	
	IV. 사회계층과 불평등	2	
	V.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1	
	VI.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0	

• 2014년 국가직 사회 가답안 ㉠책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014년 국가직 사회 가답안 ㉡책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이병철팀(이병철+이법진)의 해설강의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charisma04>), 고시스파(www.gosispa.com)에
업로드되니, 사회 문항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확인해보세요!

01 시민 혁명

해설 (가)는 명예혁명, (나)는 미국 독립 혁명, (다)는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다.

- ㄱ. 명예혁명의 결과물은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은 1628년 영국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제출하여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 승인을 얻은 청원서이다.
- ㄴ. 미국 독립 혁명은 자연권 사상(천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 ㄷ. 미국 독립 혁명으로 미국은 민주 공화제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 ㄹ.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명칭으로 선포한 선언이다.

▶ ④

02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

- 해설**
- 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로는 국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제도가 있다.
 - ② 국민 발안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 ③, ④ 국민 소환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민 소환을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다.

▶ ①

0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해설**
- ① 속칭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제1차 개헌은 총 21개 조문과 부칙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통령과 부통령의 국민직선제 채택. 2) 국회 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 채택. 3) 국회에 대한 국무원의 연대책임과 국회의 국무원불신임권, 및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개별책임. 4) 국무위원 임면에 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등이다. 국회 양원제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고, 국무원불신임권도 행사되지 못했다.
 - ② 1962년의 제5차 개헌을 통해 탄생된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다시금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1) 국회와 대통령이 각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2)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기본틀을 갖추고 있었지만, 1)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2)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었으며, 3)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적지 않았다.
 - ③ 초대대통령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는 2차 개헌내용이다.
 - ④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 ②

04 환류 모델

- 해설**
- ㄱ. 시민의 입법 청원 운동은 투입기능에 해당한다.
 - ㄴ. 현대 국가는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행정부 우위의 현상이 발생한다.
 - ㄷ. 이익 집단은 투입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ㄹ.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책 결정 기구와 산출의 역할이 강하다.

▶ ①

05 우리나라 선거 제도

해설 우리나라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변경된 비례 대표 제도는 과거 비례 대표제, 즉 1인 1표제도가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③

06 시장의 유형

해설 공급자 수에 따라서는 크게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수인 경우는 경쟁 시장으로 상품의 동질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질적인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따라서 공급자가 1인인 시장은 독점이므로 A는 독점 시장, B는 과점 시장, C는 독점적 경쟁 시장, D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 ① 담합과 카르텔은 과점 시장(C)의 특징이다.
- ②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독점 시장(A)이다.
- ③ 완전 경쟁 시장(D)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다.
- ④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가격 순응자이다.

▶ ③

07 수요와 공급

해설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180개이다.
 ② 공급자가 240개를 팔기 위해 받고자 하는 의사 금액은 1,600원으로 초과 공급이 90개 존재하는 상태이다.
 ③ 대체재의 가격 하락은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가격은 하락한다.
 ④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거래량은 줄어든다.

▶ ④

08 합리적 선택

해설 A 프로젝트 시 수익은 18만 원(200만 원의 9.0%)이다.
 B 프로젝트 시 2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이자는 5%로 10만 원이므로 감의 합리적 선택은 A 프로젝트의 18만 원보다 당연히 많아야 하며, 200만 원 대출에 대한 이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28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28만 원 = 400만 원 X (연간 수익률)'이 되어야 하므로 연간 수익률은 7% 이상이어야 한다.

▶ ②

09 경제 성장과 물가

해설 ① 실업률은 주어졌으나 실업자 수는 구할 수가 없다.
 ② '명목 GDP 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 물가 상승률'로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B국이 가장 높다.
 ③ 실질 GDP 증가율은 주어졌으나 변동액은 구할 수가 없다.
 ④ 'GDP ÷ 인구수 = 1인당 GDP'이므로 GDP 증가율인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을 때만 1인당 GDP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B국이 가장 증가율이 높다.

▶ ④

10 환율

해설 주어진 제시문은 수출 감소에 따른 환율 상승의 요인이다.

- ① 기업의 수입 원자재 부담은 증가한다.
-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한다.
-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 ④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진다.

▶ ③

11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해설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의 입장이다.

- ① 기능론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파악한다.
- ② 기능론은 사회 계층 현상은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 ③ 갈등론에 의하면 계층화 현상은 가정 배경 등의 귀속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됨을 말하나 이것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④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 ①

1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해설 (가)는 양적 연구 방법, (나)는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 ① 양적 연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하며,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강조한다.
- ② 양적 연구는 일반화를 통한 법칙 발견,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③ 가설 설정을 중시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 ④ 방법론적 일원론은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주장한다.

▶ ①

1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

해설 갑은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고, 을은 사회 실재론의 관점이다.

- ①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명목론의 관점이다.
- ② 사회가 개인의 총합이라고 보는 것은 명목론이다.
- ③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명목론이다.
- ④ 개인이 사회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실재론의 입장이다.

▶ ②

14 가족 제도

해설 ① 기타 가구에 4세대 가구가 포함되어 있어 표상에서 확대 가족의 비율을 구할 수 없다.

- ② 핵가족은 부부가구 + (한)부모와 미혼 자녀이므로 72.5% → 57.6%로 낮아졌다.
- ③ A 지역의 확대 가족 수를 구할 수가 없으나 핵가족의 비율이 50%가 넘으므로 핵가족이 더 많다.
- ④ 1세대 핵가족은 부부 가구를 의미하므로 A 지역은 10,000가구 중 11.8% 1,180가구이고 B 지역은 2,500가구의 14.2%로 355가구이므로 가족 수는 A 지역이 많다.

▶ ④

15 일탈 행동

해설 (가)는 낙인 이론, (나)는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한다.

- ㄱ. 낙인 이론은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 ㄴ. 낙인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특정 행동에 대해 일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서 일탈을 찾는 것은 생물학적 이론이이며, 사회에 부적응한 개인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 ㄷ.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서 일탈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다.
- ㄹ. 낙인 이론은 미시적 관점, 아노미는 기능론으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 ②

16 행정상 손실 보상

해설 A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집을 수용하려하기 때문에 갑은 행정상 손실 보상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 행정상 손실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사유 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 ③

17 헌법의 원리(국제평화주의)

- 해설**
- ①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며”,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선언적 의미이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침략전쟁은 자위전쟁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일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타국의 주권이나 영토보전권,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전쟁이다. 자위전쟁이란 적의 직접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전쟁을 말한다. 헌법에 규정된 침략전쟁의 부인은 자위권의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18 미성년자 보호

- 해설**
- ①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 만 13세의 중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④ 만 19세의 대학생은 성인이며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 ④

19 제조물 책임법

해설 제조물 책임의 경우 원칙적인 불법행위에 의할 때 피해자가 제조자의 상품결함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것은 상품의 결함이 제조자의 과실행위에 의해 생긴 것과 그 상품의 유통이 제조자의 의도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밝힘으로써 증명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실입증의 곤란을 완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이 행해져 과실의 증명책임이 제조자에게 옮겨진다.

▶ ③

20 기본권

해설 ▶ 우리 헌법이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에의 접근과 수집, 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권리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은 학설과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 ①